

시간제 근로

여성노동조건 크게 악화

노동부 추진에 여성계 큰 반발

정부가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시간제 근로제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적극 시행키로 해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8일 밝힌 시간제 근로제 도입은 여성이 70~80%를 차지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산전산후·월차·생리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법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여성계로부터 “여성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인력난 타개와 여성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노동부가 지난 9월 말 확정된 시간제 근로 법적용 기준은 △주당 노동시간이 법적 기준 44시간의 70%(30.8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주휴일·월차·연차·생리·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법정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시간에 비례해 적용토록 했다. 또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대폭 축소 △용역계약직에 대한 시간의 수당 삭제 등의 내용을 임금지침안으로 마련했다.

이런 시간제 근로제가 92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전국 24개

정부 차원에서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연은 또 이 때문에 “시간제, 용역계약직, 임시직에 집중돼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시간이 현저히 짧은 노동자에게 휴가·휴일의 예외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실상 시간제 노동자를 활용키 어렵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휴가·휴일을 부여할 경우 시간제 노동자 고용저해요인으로 작용하

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성의 시간제 고용확대를 위해 해선 △육아휴직·산전산후 휴가 보장 등 모성보호와 함께 △의료보험 적용 및 적정 임금·상여금·퇴직금 보장 등 고용안정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지난 5일에도 전노협과 공동으로 발표한 ‘정부의 무분별한 시간제 고용확대를 반대한다’는 성명에서 “노동부가 추진중인 시간제 노동자 법적용 기준은 여성의 취업확대보다는 기업주에게

출산휴가 제외등 모성보호 정면 위배 고용안정 차원 정규직기준 적용 마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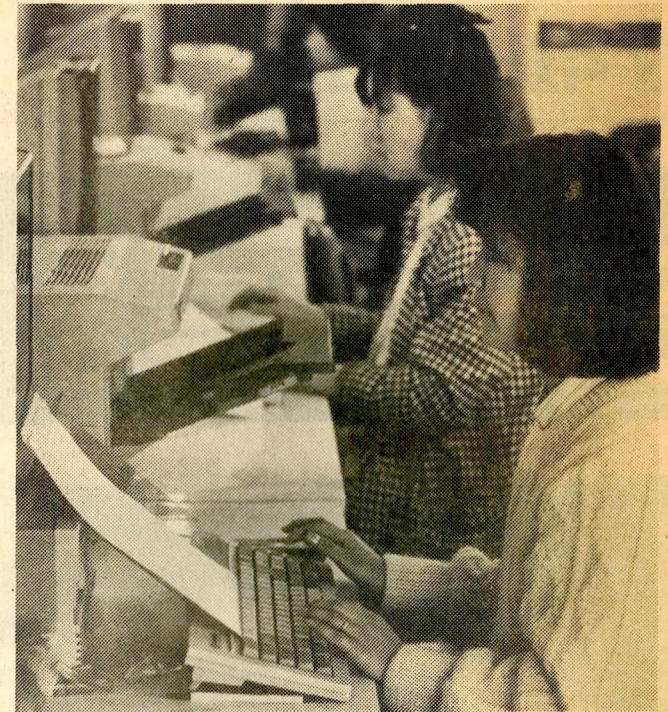
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회장 이효재)은 “노동부가 강력한 시행의지를 밝힌 시간제 노동 도입은 여성의 모성기능 파괴를 전제로 한 고용확대정책”이라면서 “이는 모성보호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는 문제점이 있어 법적용 기준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은 “법적용 기준은 ‘시간제 노동자에게 휴가·휴일 적용 제외’라는 노동조건 개악을 근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기준대로 시행될 경우 여성고용 확대는 될지 모르나 여성의 저임금화, 전체여성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

같은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면서 △인력난 해결방안은 노동조건 개선에 있으므로 시간제 고용의 무조건 확대보다는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주력하고 △시간제 고용은 특정업무에 한해 보조적·부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시간제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장방안으로 여연은 △기본임



정부가 내년부터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제 노동자에게 월차·생리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한 법적용 기준을 시행키로 해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각종 휴가·휴일도 동일하게 보장 △산재·의료보험 등 복지보험의 보장 △부당해고 금지 및 노동계약의 필수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허용 등 보호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현재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경제기획원 통계에

따르면 89년 8월 현재 주당 36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2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59.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며, 해마다 20%씩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재은 간사는 강조했다.

〈신연숙 기자〉